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



이은애\*

사단법인 seed:s 대표  
123@theseeds.asia

## 1. 들어가며

최근 탐욕적 금융자본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월가시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 대 99%' 논쟁이 뜨겁다. 세계 경제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서 보호주의 경제체제로의 '거대한 전환' (Polanyi, 1944)을 거쳐,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 심화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ost-Capitalism의 존재양식을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Ouchi(1980)나 Adler(2001)가 제기해 온 신뢰(Trust)를 매개로 하는 호혜적인 Community형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기업' 등 경제용어에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social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서울시, 부천시, 강원도 등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연구한다(2011). 한국개발연구원, 기업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사례 및 쟁점(2010), 사회적기업연구원

economy)’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로서 국내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에 이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기반조성도 강화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도 자활공동체 육성(복지부, 1996년), 사회적일자리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고용부, 2003년)에 이어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2009년), 마을기업(행안부, 2011년)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서울형 사회적기업(2010년)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는 물론이거니와 기초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및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고용과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초, 중앙 정부내 유사 정책간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정비하고자 청와대 서민정책비서관 주재로 사회적기업TF가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생산물에 대한 공공구매시 가점부여제 도입·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정책적 지원 근거마련·부처 지정형 사회적기업 육성제도 및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수립등 제도적 환경정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기업들이 고유목적활동에 대한 지역적 수요를 발견하고 지역자원망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범주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이해를 넓히고 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이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선도해 온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그간의 정책 추진방식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지난 2년간의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평가와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사항인 ‘희망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성과 및 한계

서울시는 지난 2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로, 총 733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sup>1)</sup>하였으며, 이중 411개소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통해 총 9,38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2011년도 27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예산을 고려할 때,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는데 연평균 약 291만원의 공공재정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이 된다. 그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저소득층 소득보전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의 공공근로사업이나 리먼사태 이후 추진된 희망근로사업 등과 비교해 볼 때<sup>2)</sup>, 사회적기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매우 우수한 저비용·고효율의 고용복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경영컨설팅지원, ‘더 착한 서울기업’ 35개소 지정을 통한 성장기 지원, 서울시 및 산하기관 참여하에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 추진과 전년도 기준하여 116억원에 달하는 공공구매 실적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대하여 ‘신규창업 중심의 양적확충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가 하면, 여타 광역 지자체 예산의 10배가 넘는 서울시의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지난 2년간의 정책상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까지 1천개 신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 2년내 인건비 지원’ 식의 무리한 양적확충 과정에서 재정지원 수령을 주목적으로 급조된 유사 사회적기업이 증가하였고, 결국 초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32.5%가 중도탈락하게 되면서 이들이 고용했던 취약계층들이 다시 실업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둘째, 정부 부처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조성과 성장지원 정책이 미흡한 가운데, 기존의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적 소외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성공적인 한국형 역할모델을 키워내거나 소셜 프랜차이징(social franchising)과 같은 새로운 규모화와 효율화 모델이 나타

1) 서울형 사회적기업 411개소, 마을기업 58개소,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 137개소, 자활공동체 163개소로 구성

2) 1998년부터 2002년 대규모로 진행된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당 재정지원은 연평균 680만원,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취약층 일자리 대책으로 행안부가 주도한 희망근로사업의 일자리당 지원액은 연평균 830만원 달함

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면서 민관이 보유한 다양한 사회자본을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시적인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논란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지역형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부여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재정지원 방식과 영리기업의 자문조직이 중심이 되어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적기업들의 만족도가 낮고, 지역별·업종별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구축이나 윤리적·협력적인 시민들의 소비·투자 시스템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 시민사회의 창발성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다섯째, 민관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라는 심의·의결기구가 운영중이나 서울시의 정책 추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며 사회적경제 관련한 당사자조직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 조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사회적기업의 관리감독권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서울시를 통한 기초 지자체별 특화정책 개발 지원이나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시비 보조 등은 부족한 상태여서 강남북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다 20% 증액한 319억원 정도를 2012년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책정하고, 그간의 정책제언을 수용하는 제도개선 작업은 물론 박원순 시장의 ‘99%를 위한 희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에 그간의 정책평가를 근거로 보다 대안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 3. 서울시 희망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1)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정책목표 재설정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는 ①글로벌 시장경제 확장 속에서 지역경제 위기 가중 ②내수 활성화를 가능케 할 서민경제의 중요성 부각 ③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급감 ④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 ⑤고령화 등으로 증가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지역커뮤니티 재건 필요 ⑥시민사회의 창의성과 사회적 자본

증식 및 연계의 필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는 한시적 재정지원에 의존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사회 특유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내발적 발전을 이끄는 사회적기업의 지역화와 이를 가능케 할 생태계 조성이 핵심과업으로 제기되게 된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삼농혁신, 강원도의 풀뿌리경제 육성, 전북 완주군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이 유사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에 그간 ‘취약층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서울시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한정적으로 사용해 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정책목표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서울시민의 주도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수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정책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마을기업이나 지역공헌형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조직들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의 행정부서를 넘나드는 정책대상을 포괄해 내기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리라 본다.

## 2) 창업단계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 이행

선진국과 달리 사회적기업 창업에 필요한 시민투자형 자본조달이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고용부 및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취약층의 고용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초기 자본 축적을 가능케 하는 성과를 도출시켰다. 반면, 취약층 피고용자 인건비 중심의 지원은 사회적기업 고유의 수요를 반영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수행에 참여하며 발생한 비용지원의 성격을 보이는 바, 이에 사회적기업에 과잉고용을 유발하거나 자생력을 감소시켜 정부 의존성을 키우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2010년부터 고용부의 지원정책도 직접적 재정지원에서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공공시장 판로지원 등 간접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중이다. 따라서 서울시도 관련예산의 절대다수를 차지 하였던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업의 발전단계별(창업~인증~성장~폐업)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인건비 지원의 효과가 높은 취약층 고용창출형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되, 피고용자의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 장애인 고용시에 지원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등 지원기간에 대한 차등화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와 차별화하여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지’ 를 지원대상 선정시에 심사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지역개발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전략은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못미치는 아이디어 창안단계 부터 사회적기업 인증단계의 기업과 함께 인증이후 4년이 경과한 성장기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지원할당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창안 및 창업단계의 사회적기업들은 업종이나 조직형태를 고려하여 인건비·시설비·비·무료 사회서비스 파일럿 사업비 등을 피지원 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본수요를 제시하면 심사선정을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성장기 사회적기업들의 경우에는 규모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조달의 수요가 높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계획중인 사회적투자기금이 조성되고 이러한 기금이 Patient & Long term Fund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시장형성 및 우호적 시장확보이다. 이에 세가지 성격의 시장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계를 통한 조달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의 공공조달에 있어서 ‘서울시 사회적기업 총매출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공구매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 용역 추진’ 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수익구조는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형태를 띠게 되는 바, 수익성이 높은 사업분야나 지불능력을 보유한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이용하여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나 취약층 소비자에게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 조달’ 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의무화된 사회적 목적 수행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도입된 ‘사회적기업 가점부여제’ 외에 2003년 일본 오사카 부에서 도입한 ‘종합평가 입찰제도’ 의 서울형 버전을 개발하기를 제안한다. 오사카의 경우에 ‘목적이나 성질이 경쟁입찰에 부적합할 경우 예외를 인정’ 하는 조달 규정을 이용하여, 조달 심사기준을 ‘가격 50점, 기술 14점, 환경 6점, 지역사회복지효과 30점’

으로 전환시켜 지역내 취약층 고용기업을 육성한 바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간의 내부시장 구축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과 문화예술·공정여행 사회적기업간에 융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소그룹 형태로 전환되는 중고생 수학여행 시장에 대안상품을 개발하고 공동마케팅을 수행한다던지, 서울시내 외식업 사회적기업들이 농촌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공형 사회적기업과 계약재배를 통해 도시민들의 먹거리 안전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촌경제 살리기에 일조하는 등 내부거래를 통한 상호 사회적 목적 수행을 지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기업협의체와 같은 당사자 조직들의 네트워크 지원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충분히 실현 가능해지리라 본다. 셋째, 서울은 국내 최대의 소비도시이자 인구밀집·자원밀집·대학밀집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와 시민사회계는 이미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중 하나로 자리잡은 공공의 적극성과 정책역량을 활용하는 한편, 그간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시민들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함께 풀어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적이고 호혜적인 소비 촉진·사회투자·공익서비스에 대한 후원(취약층 소비자에 대한 대리 지불)·자원 봉사·비상임 이사로서 지배구조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개발하고 참여를 독려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생산물의 품질제고 노력도 필요하며 시민적 사회자본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대중캠페인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한 사회적 차치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이러한 맞춤형 지원 과정은 유사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중앙정부의 정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육성중인 마을기업의 경우에 지역밀착성이 높은 성격을 지니는 바, 이들이 발전하여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나 소기업, 지역공동체형 자원봉사조직등 다양한 경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회적기업 전환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서울시의 수요 및 자원 조사를 통한 전략분야 및 전략지역 시범사업 필요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사회적기업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이 요구되는 분야나 동원 가능한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채 개별 조직들의 응모서류에 입각한 사업적 필요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회적기업들 내부에 연구개발부서나 지역별 통계에 접근 가능한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다보니 언론에

홍보된 국내외 사회적기업 사례를 단순 복제하거나 다분히 공급자적 필요에 기반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일부 돌봄서비스나 문화예술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장발전 전에 비해 과당 공급경쟁이 벌어지는 사례도 발견하게 된다.

이에 2010년부터 의무화 된 광역 지자체장의 사회적기업 5개년 육성계획 수립 과정을 활용하여 시정개발연구원 등 정책역량을 지닌 기관 및 기초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 욕구조사 및 지역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확충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및 추진모형을 제시하는 방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전략 사업분야로는 대학생 및 청년 주거문제 해결·뉴타운 지정해지 등에 따른 낙후지역 대안개발형 쇼셜 하우스·도시농업·로컬푸드 연계형 친환경 공공급식시스템 구축·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지역공동체형 보육시설 확충·자치구 특화산업 연계형 사회적기업 창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그 성과를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확산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역화가 강고해 지리라 전망하게 된다.

또한 생활문제가 발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물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지역 특화사업’ 등도 추진하므로써 서울시의 정책효과가 기초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전략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4) 시민사회 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이미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 발전에 있어 핵심 동력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전문분야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물론 청년(소)년경력단절여성·은퇴 시니어·취약계층 종업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훈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교육외에 인턴쉽·기술지원·국내외 기술전수 등이 가능하도록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의 강화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조직들과 협력한 폭넓은 사회적경제 구축활동·지역화폐운동·품앗이노동·전문직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인재은행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사회적기업협의체 스스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선언이나 윤리강령 채택 등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지역고용 확대(청년

포함)지역 원자재 소비율 제고·지역문화 계승 제고·지역자산 확충·지역간 불균등 발전 해소·지역 재투자율 제고 등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착한 & 공적자금 수혜조직’이란 한계를 벗어나 지역자원 조성과 일반 시민의 생활개선의 주도자라는 새로운 위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5)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시너지 확보

향후 서울시의 정책 기조 내에 시민사회의 empowerment에 기초한 분권, 자치적 경제 민주주의 신장이라는 가치 철학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관간·민민간의 거버넌스의 효용성에 대하여 재인식하는 과정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관 참여기구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주체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당사자조직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심사와 같은 부분적 측면에 머물고 있는 바,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정책의결 기능이 강화된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가칭)서울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위원회의 역할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지표 수립 및 평가, 재원 다각화 방안 마련, 서울시 부서별 유사 정책사업의 통합모델 마련, 지원정책 심의 및 평가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수요 분석·업종별 또는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조율, 전략사업 발굴 및 중간지원조직 총괄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행정부서간 연계 및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구조도 별도 운영이 필요하리라 본다.

## 6) 사회적기업의 개별적 생존을 넘어 생태계 조성을 돕는 풀뿌리 중간지원조직 확충

사회적기업과 같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중간지대에서 양자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 때,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위탁권자인 행정간에 전형적인 갑을관계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지자체-재계 및 노동계·시민사회계·잠재적 시민 기업가 및 소비자그룹 등의 적절한 참여 모델이 제안·연계·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지원에서부터 경영지원·인재육성·정보나눔 등을 통한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강조되나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특화정책 제언 등도 포괄해 나가는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간에는 이러한 중간지원 활동이 가능한 주체들이 부족한 상태여서 행정의 특정한 지원조직을 선정하여 기능위탁하는 형태를 취해 왔으나 향후로는 지역 및 업종별 사회적기업협의체나 지역별 민관거버넌스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러한 포괄적 기능수행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선배 사회적기업가들이 동종업종 신규 창업자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담보하는 경제사업을 자문하는 피어 컨설팅(peer consulting)도 확대하므로써 민간 자조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올해 기초 지자체별로 설립 예정인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이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과 어떻게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 또는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제도권 밖의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총괄적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DI**